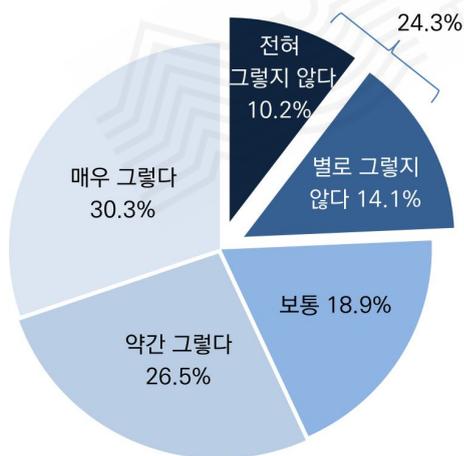


요약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 직접운영으로
반려동물 사육문화 근본적인 변화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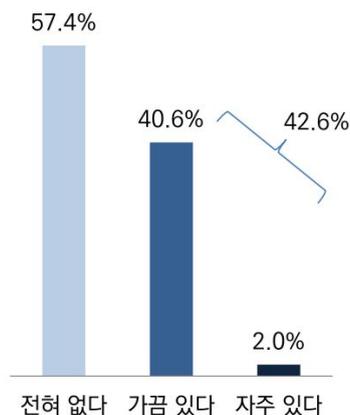
반려동물 사육가구 12년새 3%p 증가... 동물입양센터 운영 자치구 없어

서울의 반려동물¹⁾ 사육가구는 2016년 20.4%로 2004년 17.2%보다 3%p가량 증가했다. 반려동물 관련시장 또한 성장하여 2014년 1조 1천억 원~1조 4천억 원으로 추정되고 2020년에는 지금보다 3배 성장할 전망이다. 그러나 사육자 중 유기동물 등을 입양하여 키우는 경우는 11~17%에 불과하고 24% 정도는 사전지식이나 정보 없이 반려동물을 기른다. 심지어 42.6%의 사육자는 사육포기나 유기에 대한 충동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한다. 2015년 서울에서는 8,902마리의 개, 고양이가 구조되어 자치구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보호를 받았다(서울의 유기율 0.8%, 일본 도쿄도 유기율 0.2%).



출처: 서울연구원, 2014, 「사육포기동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림 1] 키우기 전 반려동물 사육 정보 취득 여부



출처: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그림 2] 반려동물 포기·유기 충동 경험

1) 본 연구의 반려동물은 개나 고양이로 한정한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민간시설 또는 동물보호단체시설에 위탁하는 형태이고, 시민 대상의 체계적인 교육이나 상담 기반은 전혀 없다. 조례상 자치구의 의무 중 하나인 동물입양센터를 운영하는 자치구 또한 한 군데도 없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동물입양센터는 연간 입양동물 수가 100마리에도 못 미칠 정도로 역할이 미흡하다. 그나마 어린이대공원, 월드컵공원, 보라매공원에 설치된 반려견 놀이터는 복지와 여가 기능과 시민 이용 측면에서 내세울 만하다. 2개 팀 6명의 공무원(2팀장, 4주무관)으로 구성된 서울시 동물보호조직은 그나마 탄탄한 수준이다. 정부는 2명(사무관 1명, 주무관 1명), 자치구는 대부분 전담자(주무관) 1명만 두고 있다. 특히 자치구 담당자는 매일 2시간을 소비해야 할 정도로 연간 421~1,451건의 동물 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도쿄, 런던 등 외국도시는 사육포기동물 인수제도 운영이 주요 특징

일본 도쿄는 반려동물의 관리를 도쿄도가 주도하고 동물보호단체(비영리단체)는 이를 보완하며 입양, 사육자 교육 등의 보조적 역할을 담당한다. 영국 런던은 런던시나 자치구의 역할이 매우 적거나 제한적인 반면 RSPCA(1824년 설립, 영국 왕실도 주요 후원자의 하나) 같은 오랜 역사의 비영리단체들이 반려동물의 보호와 관리를 주도하고 있다. 미국 뉴욕시는 뉴욕시와 비영리단체들이 동일한 업무를 중복적으로 그러나 균형 있게 수행하는 형태를 보인다. 외국 도시의 동물보호조직이나 비영리단체들이 공통적으로 행하는 역할은 배회동물 또는 학대동물의 구조·보호·입양, 사육포기동물 인수, 동물병원 운영, 길고양이 관리, 교육 등으로 광범위하고 체계적이다. 외국의 비영리단체는 전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어 도시 유기동물의 입양범위 역시 전국적이며 특히, 사육포기동물 인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은 외국 도시들의 주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활동재원도 각종 수수료, 기부금, 유산수입, 정부보조금 등으로 다양하다. 이에 반해 서울은 공공부문의 사육포기동물 인수와 교육 같은 사전예방적 기능이 없으며 재원 또한 공공부문은 공공재원에, 비영리단체는 기부금에 편중되어 있다.

서울시민 92.5% “서울시도 외국처럼 동물복지지원시설 운영해야”

시민들의 향후 반려동물 사육의사와 지금까지의 증가경향 그리고 선진국의 사육현황 등을 감안할 때 서울의 반려동물 사육가구는 29% 정도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유기 충동을 느끼는 사육자(2.0%)와 실제 유기율(서울시 0.8%), 동물 인수제도를 운영하는 외국 도시의 사례, 개보다 고양이의 사육가구가 많은 EU국가들의 반려동물 선택(개 18%, 고양이 26%) 등은 반려동물 사육을 지원하는 공공시설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실제로 서울시민들도 반려동물 관리를 위해 서울시가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을 설문조사에서 요구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주제인 외국과 같은 다양한 기능의 동물복지지원시설을 서울시가 운영하는 것에 대해 서울시민의 92.5%가 긍정적 답변을 하였다(매우 찬성 32.7%, 다소 찬성 59.8%).



[그림 3] 동물복지지원시설에 대한 서울시민의 반응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 반려동물 보호·사육문화 개선에 집중 필요

외국의 사례와 국내 정책환경의 변화, 여기에 시민의 요구를 더하면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은 폭이 넓다. 그러나 자치구의 역할과 중복을 피하고, 비영리 동물보호단체나 시장의 기능을 침해하지 않고, 시민의 거주지와 근접해야 하는 등의 제약요건을 감안하면 다음과 같은 반려동물의 보호와 사육문화 개선 사업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 ① 사육포기동물 인수(사유가 합당한 경우만 인수하고 인수수수료 징수), ② 동물입양센터²⁾ 운영(비영리 동

²⁾ 본 연구의 '입양'이라는 용어는 동물보호법상(제21조) '분양'을 뜻한다.

물보호단체에 위탁), ③ 동물병원 운영(사회적 약자의 동물 및 입원동물만 치료), ④ 교육(비영리 동물보호단체에 위탁), ⑤ 연구개발, ⑥ 상담, ⑦ 지역 동물보호활동가 플랫폼 운영.

서울시는 이 시설의 운영을 통해 연간 63억 원의 편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 분야별로 유기동물의 구조·치료 비용의 절감 350백만 원, 자치구 담당 공무원의 민원처리비용 절감 1,543백만 원, 이웃 간 소음 같은 갈등의 억제 4,396백만 원 등이다.



* 시설입지지역 자치구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그림 4]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의 역할

동물복지지원시설은 거주 시민 많은 서남생활권에 1곳 먼저 확보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은 일반 주거지역같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확보한다. 1단계 사업으로 거주 시민이 많은 서남생활권에 1개소를 확보하고, 성과가 좋으면 2단계 사업으로 나머지 생활권(동남권, 동북권, 서북권·도심권)에도 1개소씩 총 4개소의 확보를 모색한다. 시설규모는 개소당 1,000㎡ 이내가 적정하며, 사육포기동물 인수처, 입소동물 보호공간, 동물 입양처, 동물병원, 교육·세미나실, 사회화교육장, 상담실, 연구개발실, 자료실, 가족놀이터, 행정실 등의 공간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림 5]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 대상지

성과평가 후 동남, 동북, 서북·도심 생활권에 1곳씩 확보 바람직

시설은 서울시(시민건강국)의 관할 사업소로 운영하며, 필요한 인원은 4팀(동물병원팀, 인수입양팀, 교육상담팀, 기획행정팀) 21명으로 예상된다. 인수입양팀과 교육홍보팀은 비영리 동물보호단체와의 협력체제로 운영하고 교육공간 또는 유희공간은 비영리단체 또는 유관단체에 개방한다. 이동진료차량, 동물구조차량, 현장교육차량 등 찾아가는 서비스 체계도 구축한다. 운영재원은 서울시 재원을 기본으로 하되 사육포기동물 인수수수료와 입양수수료 징수, 시민의 기부금 모금 등으로 다양화한다.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운영경비를 절감한다.

서울시 동물보호과가 입지를 희망하는 서울시 상수도 봉천통합가압장(부지 635㎡, 건축연면적 636㎡)은 서남생활권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여 1단계 사업으로 적합한 장소이다. 그러나 건물 이 낡고 협소하므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공사비 대략 37억 원 규모). 사업추진과정에서 타당성조사용역이나 기본계획용역을 시행하여 운영목표, 운영조직, 운영프로그램, 위탁사업, 공간 활용, 시설명칭, 홍보, 제도 등을 보다 구체화할 것도 제안한다.



[그림 6] 서울시 상수도 봉천동 가압장 부지 전경